

전주 대비 10만명 감소, 정점 지났나

10주 만에 사흘째 감소...23일 폭증 여부 관심 정부 "며칠 더 감소 이어지면 지난주 정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부터 감소세를 보이면서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월·화요일 검사분이 반영되는 수요일에 확진자가 폭증하는 양상을 보인 만큼 오는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9169명으로 1주 전인 14일(30만9790명)보다 10만621명 감소했다. 이는 2주 전인 7일 21만709명보다도 적은 수다. 월요일 기준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한 것은 10주 만이다.

지난 16일 역대 최대 62만명의 확진자를 기록했고 18일까지도 1주 전보다 증가하는 양상이 이어졌지만 19일과 20일, 21일 사흘간은 전주 대비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주 며칠 더 지켜봐야 정점을 지났는지 확인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며칠 더 지켜봐야 분명해질 것"이라며 "계속 지난주보다 확진자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지난주를 정점으로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수요일인 오는 23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방역 당국은 23일 전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지난주 수요일인 16일에는 62만명대로 역대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중 약 7만명은 전날 통계 집계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이들이어서 사실상 16일 신규 확진자 수는 약 55만명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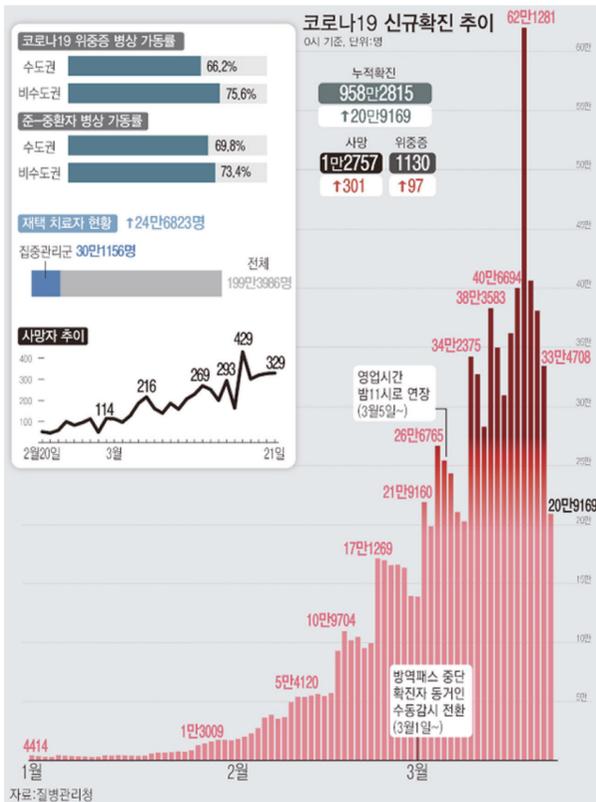
즉 23일 확진자 수가 55만명보다 줄어든다면 감소세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다시 큰 폭으로 늘어 55만명보다 많아질 경우 아직 정점이 왔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주 정점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평일에는 30만~40만 명대의 확진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말에는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이 짧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도 문을 닫는 등 검사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점이 확인된 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주에는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 선을 넘는 만큼 자연면역을 가진 인구가 2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루에 50만명의 확진자는 100만명 정도의 감염자를 의미하고 하루 전국민 2%가 면역획득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규모가 유지된다면 일주일 만에 14% 정도가 감염으로 추가적인 면역을 획득하게 되고, 곧 유행은 감



소 국면으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계에 잡히는 확진자 수가 적더라도 숨은 감염자는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일용직 노동자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증상이 없거나 심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거나 격리하는 대신 생계 등을 이유로 감기약을 먹으며 버티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오미크론의 치명률 자체가 낮아 젊은 연령층에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정부는)아직까지 확진 후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해 유증상자들에게 검사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물의날, 하천 정화활동 펼치는 삼성전자 세계 물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천에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하천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야외 소각이 대형 산불로...산불 83%가 '부주의' 탓

5년간 4690건 산불 발생...실수라도 최고 3년 징역

봄철 야외 불법 소각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발생한 산림 화재는 4690건에 달한다. 이 산불로 32명이 숨지고 18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3871건으로 가장 많다. 전체 산불의 82.5%를 차지한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꽂초'(1279건)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쓰레기 소각'(1053건), '화원 방치'(660건), '논·밭두렁 태우기'(496건), '용접·절단·연마'(79건), '불장난'(50건), '음식물 조리중'(14건), '기연물 근접 방치'(10건)

등의 순이었다. 부주의 다음으로는 '방화 의심'이 92건(2.0%)으로 많았다. '방화'(20건·0.4%)로 확인된 산불까지 합하면 112건(2.4%)으로 늘어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야외 불법 소각은 화재로 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 요인이기도



하다"면서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소각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5일~4월17일)을 설정해 산림 인접 지역의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와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회식후 택시서 부하 여직원 추행' 50대 공무원 중형 구형

검찰이 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남자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 공무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 모 구청 공무원 A(51)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의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복용하던 약물과 과음의 복합작용으로 당시 기억을 잃게 돼 의도적으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 매일 밤 자책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에 인천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 집 앞에 있던 그의 남자친구 C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주경찰, 안전한 나주 추진 보고회 개최

나주경찰서는 최근 시민이 안전한 나주를 만들기 위한 '국가·자치·수사 경찰 종합 계획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여수경찰,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솔루션 회의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1회 '통합솔루션 회의'를 개최하였다.



무안소방, 2022년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전통시장 대형 화재·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 했다고 밝혔다.



담양소방 의용소방대, 산불예방 캠페인 동참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 의용소방대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담양·곡성군 주요 등산로 등 산림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 동부소방, 노인 대학생 소방안전교육 보조강사 양성

광주 동부소방서는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프로그램실 및 조선대학교 학생회관에서 '2022년 동부소방서 노인 대학생 소방안전교육 보조강사 양성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 남부소방, 다중이용시설 시민참여 화재대피훈련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시민참여 화재대피훈련을 이마트 봉선점에서 16일 실시했다고 밝혔다.